“차량이든 사람이든 접근하면 무조건 쏘라 명령 있었다”

5·18 계엄군 3공수 지역대장 참회의 고백

“광주교도소 정문쪽에 배치 사살한 3명 중 1명은 고등학생도 안 된 앳된 얼굴 이제 광주시민에 용서 구하고 억울함 풀어주고 싶어요”

“저와 부대원들이 교도소로 다가오는 차에 총을 쏴 시위대 3명을 사살했습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접근하면 무조건 쏘라’는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당시 지휘부는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보고하지 않고 시신을 거둬 교도소 앞 야산에 묻었습니다.”

전북의 한 마을회관에서 만난 5·18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지역대장 신모(당시 32세) 전 소령은 7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군 장교 출신답게 다부진 체격이었다.

신 소령은 광주일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배치됐는데, 나를 포함한 부대원들의 일제 사격으로 시위대 3명이 죽어 교도소 앞 야산에 묻었다”고 참회의 양심고백을 했다. 5·18에 투입됐던 계엄군 중 시위대를 직접 사살하고, 암매장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북 출신인 그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소재 대학을 다니던 중 육군 3사관학교에 들어갔고 만 30세 나이에 소령으로 진급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5·18을 기점으로 고통과 번민의 삶이 이어졌다고 했다.

신 소령은 “그동안 광주시민이 군인들에게 총을 쐈다고 알려졌는데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절대 아니었다”며 “광주시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며 양심고백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신 소령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는 1980년 5월 21일 옛 광주교도소에 배치될 당시 착잡한 마음이었다고 한다. 교도소는 연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광주시민들이 내뱉는 신음소리와 부대원들이 가하는 사격소리 등으로 공포감이 가득했다는 게 신 소령의 당시 기억이다.

21일 오후 자신이 이끌고 있는 부대원들과 함께 광주교도소에 도착한 신 소령은 정문쪽에 배치돼 약 50m 떨어진 도로 쪽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았다. 광주~담양간 호남고속도로와는 반대편이었다.

광주에 투입된 3공수여단은 장교를 포함해 1392명으로, 지휘부가 있는 본부대대나 의무대, 보안대, 연행된 광주시민들은 교도소 안쪽에 머물렀다. 이들을 제외한 1000여명의 부대원들은 교도소 담장을 따라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숙영했다.

교도소 경계는 원래 있었던 경계용 참호와 3공수 이전에 방비를 맡았던 31사단이 팠던 참호(깊이 1m)를 이용해 총 100여명이 맡았고, 실탄은 개인당 60발이 지급됐다. 교도소 인근 도로에는 장갑차, 유조차, 트럭 등으로 차단벽을 만들었으며, 차단벽 너머로는 시위대의 차량 5~6대가 보였다.

22일 오전 정문 앞에서 매복하고 있던 신 소령의 시야에는 시위대가 탄 1t 트럭 한대가 포착됐다. 시위대는 트럭 뒤쪽에 설치한 캘리버 30 기관총을 쏘며 지나갔고, 신 소령과 부대원들은 응사를 해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을 사살했다. 20대가 2명이었고 나머지 1명은 중학생 정도로 보였다는 게 신 소령의 기억 속 파편이다.

신 소령은 “(시위대가)우리한테 기관총을 쏘긴 했지만 사람을 겨냥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위에서 ‘무조건 쏘라’고 명령했으니 응사했다”면서 “부하들과 차량에서 시신을 꺼내 정문에서 100여m 떨어진 도로 맞은 편 야산에 야삽으로 깊이 1m 구덩이를 판 뒤 묻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보고를 하면 위에서 부담을 느끼니까 그냥 시신을 숨기려고 보고도 하지 않고 묻었다”면서 “매장 지점에 특별한 표시를 했는지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소령이 기억하는 암매장 장소는 묘지가 1~2개 보이는 소나무숲의 비탈진 곳이다. 지금의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자리다.

신 소령의 부대는 23일 오전에는 교도소 앞 도로 차단지점으로 투입돼 조준 사격으로 시위대 한 명의 무릎을 관통시키기도 했다.

신 소령은 “시위대가 소방차를 타고 100m 앞까지 다가오자, 부하들에게 차량 바퀴를 조준하라고 했는데 한 부대원이 시위대의 무릎을 관통시켜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했다”면서 “부대원이 오발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날 오후 나한테 죽을 만큼 맞았다”고 당시의 참혹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신 소령은 “(나는) 이제 무서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 단지 광주시민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5·18에 투입됐던 다른 간부들도 이제는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 발굴 현장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 발굴현장을 취재진들이 살펴보고 있다. 5·18기념재단 등 광주 5월 단체는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이 장소에서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암매장 흔적을 찾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암매장 발굴 교도소 남쪽 부지도 조사한다

3공수 지역대장 등이 증언한 지점

5·18 기념재단과 5월단체가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로 유력한 옛 광주교도소 남쪽 부지 조사에 들어간다. 이곳은 광주일보에 증언한 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을 비롯해 같은 부대 사병, 15대대 부사관 등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지점이라 눈길을 끈다. 또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북쪽 부지 1단계 구간은 발굴 면적을 더 확대해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0일 옛 광주교도소 발굴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구간(전체 117m 구간 중 40m) 발굴 면적 확대와 함께 교도소 남쪽 부지 조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단은 민간업체에서 지표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를 섭외해 남쪽 담장 인근 땅속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등에서 싱크홀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장비는 지하 3~4m까지 투시해 공동(空洞)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계엄군이 암매장을 한 지점이라면 시신 사이 비어 있는 공간이 레이더에 탐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 장비는 평평한 부지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재단은 울퉁불퉁한 북쪽에도 투입할지는 추가 현장 조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남쪽지역은 고속도로쪽을 방비하던 15대대가 주둔하던 구역과 가까운 곳이다. 15대대는 담양으로 가려던 민간 차량 다수에 총격을 가해 희생자를 냈었다. 11대대 지역대장은 15대대 부대원들이 이곳에 시신 15구를 매장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으며, 11대대 소속 사병은 직접 5명을 묻었다고 5·18재단에 제보했다. 15대대 부사관도 이곳에 12구를 가매장했다고 제보했다.

5·18재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제보지역과 과거 시신 8구가 발굴됐던 지점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지점으로 꼽혀 온 기존 교도소 북쪽 1단계 발굴 구간은 폭을 더 넓혀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 현재 재단은 교도소 북쪽 담장을 따라 담장에서 5m 떨어진 117m 구간을 40m(폭 3m)씩 3단계로 나눠 언덕 아래쪽 1단계 구간부터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발굴 지점에서 상수도·통신 배관이 발견됐고 시신 매장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재단은 교도소 담장쪽 2.5m 지점까지 발굴 폭을 넓히기로 했다. 오는 13~14일 발굴 장소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15일부터 발굴 작업을 이어간다.

각 40m와 37m 길이인 2·3단계 구간은 1단계 추가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다.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폭 3m를 발굴하며, 1단계에서 확인된 배관 깊이까지는 중장비를 이용해 작업에 속도를 낸다. 배관부터는 문화재 발굴 방식을 활용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헬기사격 등 조사…국방부 5·18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청키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5·18특조위가 조만간 국방장관에게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한미 양국 군(軍) 문서 검토 및 관련자 면담 등 조사 활동에 쓸 시간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5·18특조위 관계자는 12일 “이번 주중 국방부 장관에게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혹 규명을 위해선 5·18관련 군 문서의 면밀한 검토와 목격자 및 군 관련자 면담이 필수적인데 조사활동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장관에게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5·18특조위 활동 근거가 되는 국방부훈령 제2070호(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는 위원회 활동기한을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국방장관에게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5·18특조위의 본래 활동기간이 3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